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3년 4월 1차



주요 현안



정부,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정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함.

- 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 논의
- 종합계획 4대 역점과제로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선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17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 개최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전략을 논의함.

-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시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3.03.28]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91&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9177

보건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정

☑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 통보함.

- ‘표준보육비용’은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되며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7천 원, 1세반 856천 원, 2세반 703천 원, 3세반 562천 원, 4-5세반 522천 원으로 결정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03.30]
https://www.mohw.go.kr/react/al/saI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7564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3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9186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시·도 국장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여성 고용과 일자리 부조화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논의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0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_Sn=709198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2023-03-29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용사례 소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의 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 및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안 제19조의7 신설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의의원 등 16인)	2023-03-29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안 제23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2023-03-30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안 제70조제4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2023-03-30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의 기반으로서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안 제22조의6·제22조의7 신설 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03-30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의원 등 10인)	2023-03-30	현행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이 아닌 의무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회적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안 제19조제1항)

가족·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2023-03-31	사업주가 휴직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법문에 명시하여,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육아휴직 허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근로자의 휴직할 권리를 보장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업무상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입히는 행위를 모두 불이익 처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안 제2조제5호, 제19조제1항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2023-04-0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2023-04-03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6조 및 제7조의2,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 제11조의2, 제17조, 제35조, 제37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2023-04-03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2023-04-03	휴직의 최소분할기간을 휴가의 연간 최대기간인 10일로 단축하여 실제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휴직제도 활용(안 제22조의2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2023-04-07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23-04-11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안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39조)

노동·고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2023-03-27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 경감(안 제18조의3제1항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2023-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 경감(안 제75조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6인)	2023-04-10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권익 제고(안 제2조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8인)	2023-04-10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 제고(안 제24조제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2023-04-1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고용 및 임금에서의 남녀 근로자 격차 완화(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3 등, 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26조)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2023-04-03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예방 함께 도모(안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의원 등 10인)	2023-04-05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군·구를 추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최소화(안 제2조제1호)
다문화·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의원 등 10인)	2023-03-28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5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젠더 폭력·안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의원 등 10인)	2023-03-28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 도모(안 제1조, 안 제3조의3신설, 안 제5조, 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삭제, 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안 제63조제2항, 안 제63조제3항)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3.26	서울신문	‘소득제한’ 걸려 난임 시술 지원 못 받는 맞벌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6500077
[KWDI 연구보고서] 노년기 가족돌봄 위기와 지원방안 연구	4.2	경향신문	주 40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어머니 돌봐 “계속 쫓기는 삶”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022143005
개원 40주년 출입기자 간담회	4.10	BBS NEWS	‘변화하는 환경과 성평등 정책의 미래’...여정연, 20일 ‘40주년 국제학술회의’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460
			문유경 원장 “페미니즘, 소수 여성에서 일상 속으로”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482
		연합뉴스	여성정책연구원장 “페미니즘, 소수 여성의 것에서 일상적 주제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0089800530?input=1195m
		서울경제	“페미니즘, 소수 여성 아닌 일상적 주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08ZJSMKQ
		뉴스1	여성정책연구원장 “페미니즘, 사회 주요 의제...정부 정책 같이 가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0_002260742&dID=10201&pID=10200
		여성신문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차별, 소수의 이슈에서 우리 일상의 주제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44
		아주경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0주년 학술대회...‘변화하는 환경과 성평등 정책 미래’ 20일 개최	https://www.ajunews.com/view/20230412110839228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3.28	조선일보	아이 갖기도 힘든데 지원 받기도 힘들다... 두번 우는 난임부부	김동식 선임연구위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28/QXPD4IBKVFDPJJIQRURK2UX7J7A/
3.30	한겨레21	외모 비하, 강간 협박... 글자로도 때리지 마라	윤지소 부연구위원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3601.html
3.31	중앙일보	남녀 임금격차, 한국이 1위...그래서 출산율 꼴찌로 떨어졌나	김난주 연구위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56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저출산 정책 대응의 심도 있는 진단과 검토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 제시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2023.04.10]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53652>